

2024년 9월 시청자평가원 활동실적

방송사명(법인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1. 회의 개최

○ 일시 및 참석인원

일시	참석인원		
	시청자평가원	시청자위원회	방송사측
-	-	-	-

2.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운영 실적

프로그램명	편성시간	편성시간 변경
바로보는TV 옴부즈맨	본방송 매주 일요일 03:50~04:20 (재방송 매주 월 00:30~01:00)	해당사항 없음

○ 방송현황

※ 프로그램 제목과 평가원 진술 주제를 3줄 이내로 기술

평가원명	방송일	방송 주요 내용	비고
박세진	9/1	[뉴스센터]꺼지지 않은 '확전 불씨'...이란 "하니에 복수는 확실" [뉴스포커스]가자 휴전협상 또 결렬...중동 확전 우려 여전	
안지연	9/8	[뉴스리뷰]"정시 올인"...학교 그만두고 검정고시 본 10대 최다 [뉴스현장]'몰카' 이어 딥페이크 성착취물까지..."韓, 딥페이크 취약국 1위"	
임윤주	9/15	[뉴스잇]자동차등록증에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명시한다 [뉴스프라임]전기버스는 안전한가...배터리 정보 '깜깜이'	
김홍태	9/22	[뉴스15]기준금리 언제 내리나...한은 "깎았 더 뿔라" 고심 [뉴스08]'전세계 3대기금' 국민연금 수익률 높인다...리스크 우려도	
최미연	9/29	[뉴스투나잇]전'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11월 15일 선고 [뉴스프라임]50년 뒤 한국인구 3분의 1 소멸..."절반이 노인"	

3. 시청자평가원 변동사항

구분	성명	전·현직	평가원 선임일	비고 (변경사유 등)
활동	김홍태	변호사 (법무법인 대운)	2018. 06. 28	-
활동	임윤주	이화여대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연구소 연구원	2021. 11. 28	-
활동	안지연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2023. 01. 31	-
만료	박세진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정보사회미디어학과 조교수	2023. 05. 31	8월에 마지막 녹화분 9월 방송
활동	최미연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	2024. 07. 25	-

붙임 : 1. 평가원 진술 및 답변내용 1부.

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1부.

[붙임1]

<평가원 진술 및 방송사측 답변 내용>

방송일시	평가원명	평가원 진술내용	답변내용
2024 9/1(일)	박세진	<p>연합뉴스TV는 지난달 27일,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이 대규모 공습을 주고받았고, 양측 모두 작전 성공을 자평하며 상황이 일단락되는 분위기지만 이란의 개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전히 긴장감이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란 외무장관이 수도 테헤란에서 벌어진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 암살 사건에 대해 확실하게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고, 이란 참모총장도 이란 진영의 '저항의 축'이 각자의 역량과 수단에 따라 복수를 수행할 것임을 주장하며, 조만간 언제 어떻게 복수할지 결정할 것임을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우리 국민 180여 명이 종교단체 행사 참석을 위해 이스라엘에 도착했고, 정부가 이들을 포함해 이스라엘에 체류하고 있는 680여 명의 국민에게 출국을 강력히 권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외교부가 지난달 초 이스라엘과 레바논 접경 지역에 '여행금지'인 4단계 여행경보를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나머지 지역에는 '출국권고'인 3단계 여행경보를 각각 발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동 지역 정세는 국제 유가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우리나라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력이 큰 사안이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더불어 한반도의 군사적, 외교적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p>	<p>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애초 입국 자체를 왜 막지 못했느냐 하는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 관련 리포트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p>

		<p>이러한 상황에서 연합뉴스TV가 적시적인 보도와 면밀한 분석을 통해 중동 정세에 대한 시청자들을 이해를 돕는 보도를 해주었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전면전으로의 확전 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군사적 충돌의 지속 여부에 대한 전문가의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시청자들의 중동 정세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 180여 명의 이스라엘 입국과 관련한 보도에서 정부의 조치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 부족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한 달여 전에 발령된 여행경보 4단계를 고려할 때, 이번 단체 입국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여행사와 항공사, 그리고 정부 간의 협조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했다면 보다 바람직한 보도가 되었을 것으로 평가됩니다.</p>	
2024 9/8(일)	안지연	<p>지난달 30일에 보도된 뉴스리뷰의 보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올해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한 10대 학생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는 교육부의 자료를 인용해 13세에서 19세 학생 중 3만 3,286명이 응시했고, 이는 약 3,200명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정시 모집 확대로 수능에 집중하려는 학생들이 늘어났고 수시 모집에서 내신의 영향력이 증가했다는 점도 이러한 현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했습니다. 특히, 보도에서는 의대 열풍까지 더해져 앞으로도 이 추세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고</p>	<p>해당 기사는 취재 기자가 오랜 기간 교육부 등에 단독으로 통계 자료를 요청했다가 받은 자료를 인용해 기사화한 것으로 검정고시 응시생이 증가한 이유를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최근의 대 증원 이슈가 교육계 최대 현안인지라 이를 연관해 기사화하려 노력했습니다. 검정고시는 1년에 두 차례 실시하는 만큼 기회가 된다면 말씀하신 입시생 외에 검정고시 응시생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담아 기사화하는</p>

		<p>전했습니다. 보도는 10대 학생들의 검정고시 응시율 증가와 그 배경을 분석했습니다. 교육부의 자료를 인용해 정확한 통계를 제공해 시청자들이 이러한 현상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교육 전문가들의 견해를 통해 정시 확대와 의대 진학 열풍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해 시청자들이 이 현상의 배경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게 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보도는 검정고시 응시율 증가 현상을 정시 확대와 의대 열풍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입시 당사자인 학생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이를 바라보는 교육 현장의 입장 등을 다루지 않아 다각도로 현상을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욱이 보도는 입시 제도 변화에 초점을 맞춰 이러한 현상을 소개했는데요,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안이나 정책적 제언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추후 관련 보도에서는 현상을 다방면으로 살펴보고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이 전달되길 바랍니다.</p>	<p>것도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p>
2024 9/15(일)	임윤주	<p>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와 관련하여 보도한 <뉴스17>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유튜브에서 딥페이크로 얼굴을 합성할 수 있는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영상들은 제목부터 딥페이크 합성 얼굴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고 어떻게 조작해야 하는지를 단계별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최대한 쉽게 사진이나 동영상</p>	<p>딥페이크 모방 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유튜브 등에서 악용될 수 있는 딥페이크 제작 현황 등을 전달해 관련 범죄에 노출 또는 이용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처럼 자료 화면을 오인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최대한 모자이크 처리하려고 노력했는데 앞으로 제작시 더욱</p>

		<p>상의 얼굴만 바꾸는 법을 알려주는 영상들도 인기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알리기 위해 이런 영상들이 만들어졌지만, 이젠 딥페이크 범죄에 악용되진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범죄로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들을 포함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올바른 기술 사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 속도를 앞서는 상황인데, 전문가들은 당장 해외 플랫폼의 콘텐츠를 제한할 수는 없더라도 모방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어디까지 허용할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본 보도는 최근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 영상과 관련하여, 동영상 플랫폼에서 제작법이 많이 공개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들을 통해 모방 범죄가 일어날 수 있음을 강조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과 관련된 사건 사고는, 비단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이슈로 필요한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본 보도는 사실상 플랫폼의 자율 규제 강화 및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제도와 규범 마련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강조점이 잘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보도에서도 지적하였던 모방범죄 예방을 위해 자료 화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p>	<p>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p>
2024 9/22(일)	김홍태	<p>지난 주 첫 소식은 지난 17일 뉴스15인데요, 정치권 안팎에서 내수 살릴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면서 이제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는데요, 하지만 한국은행은 여전히 신중모드</p>	<p>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꾸준히 보도해왔던 터라 이번 리포트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의 입장과 대내외 변수 등을 상세히</p>

		<p>라고 전했습니다. 올해 금통위는 10월과 11월 단 두 차례 남았는데요, 이달 내에 정부의 강력한 가계 대출 규제가 얼마나 효과를 내느냐에 따라 한은의 금리 인하 시계 속도가 정해질 전망이다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이 보도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비추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여부와 관련된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전달하고 있어 유용합니다. 특히 유럽중앙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움직임을 비교하며 한국의 상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여당과 한국은행 간의 입장 차이를 전달하며 금리 인하 논의가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것도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의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좀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금리 인하가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켜 내수 진작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나 가계 부채에 미칠 부정적인 측면의 구체적 간단한 사례나 통계가 있다면 더욱 풍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신중한 태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가계 부채의 위험이 어떤 방식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금리 인하로 인해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상승과 거품에 대한 경고를 강조하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가 꽤 크기 때문에 금리 인하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분석과 멘트는 꼭 필요해 보였습니다.</p>	<p>전달하는 주안점을 뒀습니다. 금리 인하가 소비와 내수,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한미 금리차에 대해서도 별도 단신 등으로 다뤘지만 위원님의 지적처럼 관련 내용도 리포트에 담았다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는데 더 도움이 됐을걸로 보입니다. 향후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하여 더욱 입체적인 보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2024 9/29(일)	최미연	<p>북한의 풍선 도발이 거듭되면서 우리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선을 넘을 경우 군사적 조치</p>	<p>북한은 지난 5월부터 10월 4일까지 24차례 쓰레기 풍선을 부양하고 있습</p>

		<p>에 나설 것이라고 엄중 경고 했습니다. 현재는 북한에서 날아온 풍선에 대해서는 자연 낙하 후 수거하는 대응 방식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북한의 쓰레기 풍선 도발은 갈등을 유발하려는 도발행위로 비판하며, 국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을 경우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20여 차례에 걸쳐 5,500여 개의 쓰레기 풍선을 남한으로 보내왔으며,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치졸한 도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군은 풍선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거나 선을 넘으면 단호한 군사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아직 군사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풍선은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낙하 즉시 수거하고 있으며, 신속하게 제거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이 풍선 제작에 우리 돈으로 약 5억 5천만원, 북한 시세로 쌀 970t에 해당하는 큰 비용을 들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22차례에 걸쳐 총 5500여개의 쓰레기 풍선을 날렸으며, 지난 9월 22일부터 23일 아침까지 띄운 쓰레기 풍선은 120여개로 밝혀졌습니다. 합참은 이에 대해 북한의 계속된 쓰레기 풍선으로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북한에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p>	<p>니다. 연합뉴스TV는 그동안 북한의 풍선 도발 의도와 우리의 대응, 또 국민의 안전 문제에 관해 어느 매체보다 적극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말씀하신 보도는 합참에서 이전보다 강한 톤의 성명을 내고 신원식 안보실장도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해당 발언을 한 상황이어서, 관련 내용에 대해 보도에 비중을 뒀습니다. 지적하신 부분 감안해 향후 보도에 참고하겠습니다.</p>
		<p>에 나설 것이라고 엄중 경고 했습니다. 현재는 북한에서 날아온 풍선에 대해서는 자연 낙하 후 수거하는 대응 방식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북한의 쓰레기 풍선 도발은 갈등을 유발하려는 도발행위로 비판하며, 국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을 경우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20여 차례에 걸쳐 5,500여 개의 쓰레기 풍선을 남한으로 보내왔으며,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치졸한 도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군은 풍선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거나 선을 넘으면 단호한 군사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아직 군사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풍선은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낙하 즉시 수거하고 있으며, 신속하게 제거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이 풍선 제작에 우리 돈으로 약 5억 5천만원, 북한 시세로 쌀 970t에 해당하는 큰 비용을 들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22차례에 걸쳐 총 5500여개의 쓰레기 풍선을 날렸으며, 지난 9월 22일부터 23일 아침까지 띄운 쓰레기 풍선은 120여개로 밝혀졌습니다. 합참은 이에 대해 북한의 계속된 쓰레기 풍선으로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북한에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p>	<p>니다. 연합뉴스TV는 그동안 북한의 풍선 도발 의도와 우리의 대응, 또 국민의 안전 문제에 관해 어느 매체보다 적극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말씀하신 보도는 합참에서 이전보다 강한 톤의 성명을 내고 신원식 안보실장도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해당 발언을 한 상황이어서, 관련 내용에 대해 보도에 비중을 뒀습니다. 지적하신 부분 감안해 향후 보도에 참고하겠습니다.</p>

	<p>도발은 약 4개월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쓰레기 풍선에 대한 단호한 군사적 조치와 실시간 추적 및 신속한 수거도 물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군사적 대응일 수 있지만, 북한의 목적이나 의도에 대한 분석이 깊이 있게 다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북한이 도발행위를 하는 의도나 정치적 맥락에 대한 분석 또는 북한 풍선 격추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과 풍선 도발의 심각성 등을 균형있게 다뤄준다면 시청자들에게 명확한 내용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황에 대한 정보 전달에 집중했지만 구체적 정보나 대응방안, 군이 밝힌 비용 추정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전달하여 보도의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p>	
--	--	--

[붙임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 **박세진 시청자평가원(24. 09. 01 방송) : <바로보는 TV 음부즈맨 666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박세진입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레바논에 기반을 둔 무장단체 헤즈볼라 간의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며, 대규모 공습과 보복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돌은 중동 지역의 정치적, 군사적 상황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며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연합뉴스TV의 관련 보도를 살펴볼 것입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달 27일,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이 대규모 공습을 주고받았고, 양측 모두 작전 성공을 자평하며 상황이 일단락되는 분위기지만 이란의 개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전히 긴장감이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란 외무장관이 수도 테헤란에서 벌어진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 암살 사건에 대해 확실하게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고, 이란 참모총장도 이란 진영의 '저항의 축'이 각자의 역량과 수단에 따라 복수를 수행할 것임을 주장하며, 조만간 언제 어떻게 복수할지 결정할 것임을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날 뉴스포커스에서는 백승훈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 중동지역의 정세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백 전임연구원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긴장 관계가 지속되며 휴전 협상이 무위에 그치고 있는 만큼 중동 지역이 안정을 찾는 데는 상당한 시간일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며, 현재 전면전으로 확전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미국, 유럽 등의 중재와 이스라엘의 전쟁 지속 가능 능력에 비춰볼 때 인해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지만 미국 대선 전까지 중동의 긴장감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국민 180여명이 이스라엘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우리 국민 180여 명이 종교단체 행사 참석을 위해 이스라엘에 도착했고, 정부가 이들을 포함해 이스라엘에 체류하고 있는 680여 명의 국민에게 출국을 강력히 권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외교부가 지난달 초 이스라엘과 레바논 접경지역에 '여행금지'인 4단계 여행경보를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나머지 지역에는 '출국권고'인 3단계 여행경보를 각각 발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동 지역 정세는 국제유가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우리나라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력이 큰 사안이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더불어 한반도의 군사적, 외교적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합뉴스TV가 적시적인 보도와 면밀한 분석을 통해 중동 정세에 대한 시청자들을 이해를 돕는 보도를 해주었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전면전으로의 확전 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군사적 충돌의 지속 여부에 대한 전문가의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시청자들의 중동 정세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 180여 명의 이스라엘 입국과 관련한 보도에서 정부의 조치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 부족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한 달여 전에 발령된 여행경보 4단계를 고려할 때, 이번 단체 입국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여행사와 항공사, 그리고 정부 간의 협조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했다면 보다 바람직한 보도가 되었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무인공격기 성능시험을 현장 지도하며 하루빨리 실전 배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말 북한 무인기 침투사건 및 최근에 있었던 오물풍선 살포와 연계해 조속히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전한 연합뉴스TV의 보도를 살펴볼 것입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달 26일,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인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국방과학원 무인기연구소를 찾아 최근 개발한 무인기들의 타격시험을 현지지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이 무인기 성능에 만족감을 드러내며 각종 자폭형 무인기를 더 많이 만들어낼 것을 지시했고, 전투적용시험을 보다 강도 높게 진행해 하루빨리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기사는 북한이 자폭 무인기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무인기의 외형이 러시아 무인기와 유사하다는 점에 비춰볼 때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무인기 제작 기술을 전달받아 성능 개량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공개된 무인기가 대량 생산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지원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을 전하며 보도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폭 무인기는 현대전에서 전차, 즉, 탱크를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되는 데다 사람이 직접 탱크에 근접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고, 레이더 망에 잘 포착되지 않아 제공망 및 방공망을 회피하며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탱크 상부를 자폭형 드론으로 공격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는데, 탱크 상부는 승무원이 드나드는 해치와, 적을 따라 회전하는 포탑이 있어 장갑판 설치가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드론은 효과적으로 적의 탱크를 무력화 할 수 있는 무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처음으로 자폭 무인기를 공개했다는 것은 우리 군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응 전략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서울 상공을 누볐던 북한 무인기 사건과 최근 오물풍선 살포 등에 비춰볼 때 북한이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을 살펴보는 보도가 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 군이 무인기 탐지와 요격체계를 철저히 갖추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확하게 어떠한 체계를 갖추고 있고, 미비한 부분을 언제까지 보완할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만큼 연합뉴스TV가 중심이 되어 대응책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지난달 초,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 250대를 생산해 전방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국가정보원이 그에 대한 평가를 내렸는데요, 연합뉴스 TV의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6일,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대 250대를 전방에 배치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발사대를 갖췄더라도 미사일 수급 능력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 미사일 발사 시 우리나라의 피해 범위에 대해서는 "110km 정도 날아가기 때문에 충청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신형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를 배치한다고 밝힌 이후 대남 위협 정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져왔습니다. 이번에 국가정보원이 밝힌 대로 북한이 미사일을 원활하게 생산해 물량을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근거리용 미사일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이 정해져 있는데, 대북제재가 작동중인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되면서 미사일 부품 수급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 등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타 국가의 지원이 있을 경우 북한의 위협이 현실화 되면서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망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 만큼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보도에서는 국가정보원의 발언을 그대로 전하는 단신보도에 그쳤지만, 후속 보도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 추가 배치에 상응하는 우리 군의 대응 전략은 무엇이고, 실효성은 어느 수준인지 살펴보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 안지연 시청자평가원(24. 09. 08 방송) : <바로보는 TV 음부즈맨 667회 - '연합뉴스TV

를 말한다>

한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안지연입니다.

학업을 중단하고 검정고시를 선택하는 10대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학교를 떠나는 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입시를 위한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 같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30일에 보도된 뉴스리뷰의 보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올해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한 10대 학생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는 교육부의 자료를 인용해 13세에서 19세 학생 중 3만 3,286명이 응시했고, 이는 약 3,200명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정시 모집 확대로 수능에 집중하려는 학생들이 늘어났고 수시 모집에서 내신의 영향력이 증가했다는 점도 이러한 현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했습니다. 특히, 보도에서는 의대 열풍까지 더해져 앞으로도 이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보도는 10대 학생들의 검정고시 응시율 증가와 그 배경을 분석했습니다. 교육부의 자료를 인용해 정확한 통계를 제공해 시청자들이 이러한 현상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교육 전문가들의 견해를 통해 정시 확대와 의대 진학 열풍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해 시청자들이 이 현상의 배경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게 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보도는 검정고시 응시율 증가 현상을 정시 확대와 의대 열풍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입시 당사자인 학생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이를 바라보는 교육 현장의 입장 등을 다루지 않아 다각도로 현상을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욱이 보도는 입시 제도 변화에 초점을 맞춰 이러한 현상을 소개했는데요,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안이나 정책적 제언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추후 관련 보도에서는 현상을 다방면으로 살펴보고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이 전달되길 바랍니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와 관련된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 문제에 가장 취약한 국가로 지목되었는데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경찰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혐의로 텔레그램 법인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는데요, 지난 주 연합뉴스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먼저 지난 30일 뉴스현장에서는 전 세계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가장 국가로 한국이 지목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성착취물 사이트와 유튜브 등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 올라온 영상물을 분석한 결과 전 세계 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한국인이며 대부분 여성 연예인들이 피해자인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신들은 한국을 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의 진앙지로 지목하는 등 한국이 딥페이크 범죄 비상사태에 직면했음을 진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와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력해 음란물의 신속한 삭제 및 차단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이 성착취물

의 온상이 된 텔레그램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는 보도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지난 2일 뉴스프라임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딥페이크 음란물이 빠르게 확산되자 텔레그램이 성범죄를 방조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텔레그램이 범죄 확산을 방조한 책임을 지적했다고 보도는 전했습니다.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국제 공조를 통해 텔레그램 수사에 나설 방법을 찾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전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가해자들은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법적 규제와 함께 법 개정의 필요성과 플랫폼 관리 책임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보도를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과 플랫폼의 역할 및 책임이 강조되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을 상대로 한 경찰의 내사 착수는 플랫폼이 단순 기술 이용을 위한 도구를 넘어 범죄 확산 방조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경고와 법적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도는 딥페이크라는 기술을 활용해 범죄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플랫폼과 가해자 모두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이는 딥페이크 성범죄 차단을 위한 강력한 법적 조치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제 공조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다만, 보도에서는 법적 규제와 국제 공조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법적 대응과 관련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했던 점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추후 관련 보도에서는 법적, 기술적 대책을 구체적으로 다룬다면 시청자들에게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발생한 땅꺼짐 사고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상하수관 손상과 토목공사의 부실이 지목되었는데요, 반복되는 사고로 인해 관리 시스템의 개선과 시민들의 안전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31일 뉴스잇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보도는 땅꺼짐 사고의 원인과 도시 기반 시설의 점검과 유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성산로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로 차량이 빠져 운전자 등 2명이 크게 다쳤고, 하루 뒤 불과 30m 떨어진 곳에서도 지반 침하가 발생했는데요, 두 지역 모두 서울시의 정기점검 당시에는 특이사항이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에서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957건의 땅꺼짐이 발생했고 그 가운데 경기도가 197건, 광주 122건, 부산 85건 순으로 많았다고 설명하면서 상하수관 손상과 토목공사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꾸준한 관리와 토목공사 시 안전관리 규정 강화의 필요성, 배수시설 누설과 매설물 손상도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지자체의 수시점검 등의 관리 강화, 도로의 지반 침하 전조증상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보도는 땅꺼짐 사고를 통해 도시 인프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고 현장과 관련된 통계 자료를 활용해 시청자들이 상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고,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안전 관리 규정의 중요성과 해결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 특히 사고 원인으로 상하수관 손상과 배수시설 누수를 지목하며, 시청자들에게 이를 명확하게 전달했는데요, 이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사고의 심각성을 인식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견해는 충분히 다루어진 반면, 시민들의 입장이나 사고 관련 불안감, 구체적인 예방 조치와 정책적 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쉽게 느껴집니다. 추후 관련 보도에서는 사고 예방과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적 방안과 함께 다양한 관점을 다루어 주길 기대합니다. 경기지역 버스노조가 4일 첫차부터 총파업을 예고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불안하게 했는데요, 결국 사측과 경기도버스노조협회가 최종 합의해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출근길 대란은 피했지만 매년 같은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만큼 이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4일 뉴스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는 경기도버스노조협회가 사측과 최종 합의해 버스 파업을 철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견이 컸던 임금 인상 폭의 경우 준공영제 노선과 민영제 노선 모두 7%씩 인상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입장에서 갑자기 시내버스가 중단이 되면 대체 수단이 없어 많은 불편함을 느낀다는 시민의 의견을 덧붙이며 파업 돌입 시 지하철 연장 운행 등 서울 시내 교통편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반복되는 파업을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공공관리제를 통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계획을 갖고 추진 중이라는 경기도지사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또한, 보도에서는 인천시처럼 노사정 합의를 통해 3년 치 임금인상률을 한 번에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되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노사 노력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보도에서 살펴본 것처럼 경기도 버스 파업이 임금 7% 인상 합의로 가까스로 철회되었지만, 매년 반복되는 임단협 갈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느끼는 피로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파업이 진행될 경우 출퇴근 교통 대란이 불가피했을 것이며, 대중교통 이용객들은 큰 불편을 겪을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특히 시민들은 대체 교통 수단 부족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보도는 노사 간 갈등이 교통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강조하며, 시청자들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출근길 대란을 피할 수 있었지만 반복되는 갈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장기적인 해결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서는 파업 철회에 따른 긍정적인 결과를 제시해줬지만 노사 간 갈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 제안이 부족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경기도지사도 공공관리제 도입 등의 해결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추후 관련 보도에서는 공공관리제 도입 및 다년 임금 협상 방안 등 갈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다뤄 구체적인 정책적 대책이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 임윤주 시청자평가원(24. 09. 15 방송) : <바로보는 TV 음부즈맨 668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임윤주입니다. 최근 전기차 배터리 화재 발생으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관련하여 보도한 <뉴스잇> 살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관리법' 하위법령을 다음 달 10월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제작사와 수입사가 전기차를 판매할 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자동차등록증에도 이런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관련 법령의 핵심입니다. 기존 자동차등록증 서식도 대폭 바뀌는데 배터리 용량, 최고 출력, 배터리 셀의 제조사와 주요 원료 등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동안 배터리 정보에 대해 알기 어려웠던 만큼, 소비자 알권리를 위한 조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는, 이러한 공개 자체가 배터리 안전성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사전 인증제를 다음 달로 앞당겨 시행하지만, 완성차 단계에서의 인증 시험이라 안전성을 모두 담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전문가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 인증이 필요하고, 특히 배터리 팩 단위가 아닌 셀 단위의 인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이 배터리 셀 불량이나 파손인 만큼, 배터리 셀 전량 검수를 통한 안전성 인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전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전기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전기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최근 화재로 인하여 대형 화재 및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려에서 신속하게 나온 입법 예고인데요. 빠르게 대응에 나선 것은 긍정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보도는 이러한 부분을 전달력 있게 짚어주며 설명한 좋은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본 보도에서 설명하였듯, 해당 법안은 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향후 국민들의 입법 참여 기회가 남아 있다는 것인데요. 본 보도에서 지적하였던 부분들도 해당 법령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하여 또 다른 측면을 짚어준 <뉴스프라이머>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 이후 현재까지, 국내외 완성차 브랜드 21곳이 모두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습니다. 사실상 국내에서 전기 승용차를 판매하는 모든 브랜드들이 배터리 제조업체를 밝힌 겁니다. 같은 전기차지만, 전기버스의 사정은 달랐습니다. 국내에서 판매 인증을 받은 국내외 전기버스 브랜드는 25곳 가까이 되지만, 현대차 포함 7곳 정도만 배터리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즉, 전기버스 브랜드 가운데 70%가 어떤 배터리를 쓰는지 알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전기 승용차 업체들이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배터리 정보를 공개한 것처럼, 모든 전기버스 브랜드들도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옵니다. 전기버스에 불이 날 경우 빠른 화재 대응을 위해서도 정

보 공개가 필요하단 설명입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전기버스는 전기 용량 자체가 승용차에 비해 5배 이상 많이 들어가고, 화재 역시 확산 속도가 빠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본 보도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 관련 대응 방안 마련에 있어 자칫 주목받지 못할 부분에 대한 전기버스에 집중하여 전하는 의미 있는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전기버스는 많은 시민이 한꺼번에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만큼, 전기차 못지않은 기준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 보도는 배터리 용량을 승용차와 비교하여 설명하는 등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본 보도 이후 정부에서도 전기버스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강화에 힘쓰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승용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배터리 검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측면에서 해당 법령이 보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도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고용률 증가에 대해 보도한 <뉴스프라이머>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젊은 남녀의 초혼 건수는 14만 9천여건입니다. 이는 2010년에 비해 약 41.2%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평균 초혼 연령도 늦어져 지난해 남성은 34세, 여성은 31.5세로, 13년 사이 남성은 2.2세, 여성은 2.6세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5세에서 64세 사이 여성 고용률은 2010년 이후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여성 고용률은 61.4%로 13년 전보다 8.7%p 상승했고, 남녀 간 고용률 차이도 점차 줄어 2010년 21.3%p에서 지난해엔 15.5%p까지로 좁혀졌습니다. 특히 30대 초반 여성 고용률은 13년 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이에 대해 전문가는 저출산 이슈와도 맞물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는 과거에는 30대 초반이면 육아기에 들어간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겪었던 연령대였으나, 최근에는 출산이 늦어지거나 혹은 출산을 하지 않으면서 노동시장에서 이탈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쉽게도 본 보도가 어떤 주제를 전하고자 했는지 명확하게 전달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기사 헤드라인을 살펴보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초혼 건수와 여성 고용률 수치를 내세웠습니다. 같은 맥락처럼 보여 자칫 잘못된 인과관계를 보여줄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보도에서 전했던 초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나 30대 초반 여성 고용률이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을 전달하였다면, 전체적인 의미가 전달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자료화면을 살펴보면, 보도와 관계없는 결혼식 영상이 나오는데요. 이보다는 전달하고 있는 수치의 그래프를 전달하였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일부 수치에 대한 그래프가 제공되었지만 출처가 제공되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출처를 확인하고 난 후, 해당 보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본 통계 결과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4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의 내용으로, 노동시장 뿐 아니라 사회인식에 대한 남녀의 모습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아마도 보도는 해당 통계를 통해 사회 모습의 변화를 전하고자 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요. 많은 지표 가운데 간략하게 전하고자 노력했을 것으로 이해되지만, 향후에는 출처 등 보다 명확한 전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와 관련하여 보도한 <뉴스17> 살펴보겠습니다

다. 보도는, 유튜브에서 딥페이크로 얼굴을 합성할 수 있는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영상들은 제목부터 딥페이크 합성 얼굴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고 어떻게 조작해야 하는지를 단계별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최대한 쉽게 사진이나 동영상의 얼굴만 바꾸는 법을 알려주는 영상들도 인기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알리기 위해 이런 영상들이 만들어졌지만, 이젠 딥페이크 범죄에 악용되진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범죄로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들을 포함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올바른 기술 사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 속도를 앞서는 상황인데, 전문가들은 당장 해외 플랫폼의 콘텐츠를 제한할 수는 없더라도 모방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어디까지 허용할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본 보도는 최근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 영상과 관련하여, 동영상 플랫폼에서 제작법이 많이 공개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들을 통해 모방 범죄가 일어날 수 있음을 강조했는데, 딥페이크 영상과 관련된 사건 사고는, 비단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이슈로 필요한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본 보도는 사실상 플랫폼의 자율 규제 강화 및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제도와 규범 마련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강조점이 잘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보도에서도 지적하였던 모방범죄 예방을 위해 자료 화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해 지적한 <뉴스리뷰>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의 한 마트 내 정육 판매점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반이 고기마다 표기된 축산물 이력을 확인하였으나, 실제 내용과 다른 내용이 표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돼지고기의 이력번호를 거짓 표시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마트에서는 콩나물 등 채소의 원산지 표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또는 미표시로 적발된 업체는 모두 1만 6,700여 곳으로, 한 해 평균 3,300여 곳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관리팀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지속성과 반복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보도는 추석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환기를 불러일으킨 중요한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구매를 하게 되는 소비자 뿐 아니라 판매자들에게도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보도였는데요. 관계 기관에서도 꾸준히 단속을 하고 있는 만큼, 연합뉴스TV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 김홍태 시청자평가원(24. 09. 22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669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김홍태입니다. 지난 주 연합뉴스에

서는 정부가 연금개혁안에서 국민연금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선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도 관련법안이 발의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부부·연인 등 관계에서 발생하는 살인 또는 살인미수 사건의 10건 중 4건꼴로 가해자가 범행 이전부터 폭력을 행사해 왔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주 첫 소식은 지난 17일 뉴스15인데요, 정치권 안팎에서 내수 살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면서 이제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는데요, 하지만 한국은행은 여전히 신중모드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언제 금리 인하를 할지가 관심이라고 전했는데요, 유럽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3개월 만에 또 내렸고, 이 방송 당시에는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도 금리 인하 폭을 놓고 고심 중이었습니다. 내수 부진 고민이 깊은 정부·여당은 한은을 향해 금리 인하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데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작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역대 최장 13차례 연속 금리를 연 3.5%로 묶어뒀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내수 진작 문제 차원에서 봤을 때는 금리 동결이 약간의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는 조심스런 의견을 전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며 인하 여건이 무르익었다는 평가도 나온다고 하나, 한은 기조는 여전히 '신중론'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자율을 급히 낮춘다든지 유동성을 과잉 공급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실수는 범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들쭉이는 집값과 불어난 가계 부채 규모를 고려하면 선불리 내릴 상황이 아니라는 건데요,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25주 연속 상승했고, 주택담보대출액은 지난 달 8조 2천억 원 늘어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습니다. 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만약에 연내 기준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정부 조치들이 효과를 분명히 내는 상황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올해 금통위는 10월과 11월 단 두 차례 남았는데, 이달 내에 정부의 강력한 가계 대출 규제가 얼마나 효과를 내느냐에 따라 한은의 금리 인하 시계 속도가 정해질 전망이다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이 보도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비추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여부와 관련된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전달하고 있어 유용합니다. 특히 유럽중앙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움직임을 비교하며 한국의 상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여당과 한국은행 간의 입장 차이를 전달하며 금리 인하 논의가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것도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의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좀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금리 인하가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켜 내수 진작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나 가계 부채에 미칠 부정적인 측면의 구체적 간단한 사례나 통계가 있었다면 더욱 풍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신중한 태도가 왜 중요한지 이에 대한 설명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가계 부채의 위험이 어떤 방식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금리 인하로 인해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상승과 거품에 대한 경고를 강조하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가 꽤 크기 때문에 금리 인하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분석과 멘트는 꼭 필요해 보였습니다. 지난 17일 뉴스08에서는, 정부는 연금개혁안에서 국민연금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는데요,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게 되는 만큼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작년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의 규모는 1,036조원으로 일본공적연금, 노르웨이 국부펀드에 이은 3대 연기금으로,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연평균 5.92%의 수익률을 내고 있으며, 작년에는 14.14%로 역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다고 하십니다.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통해 국민연금 장기 수익률을 연평균 4.5%에서 5.5%로 1%포인트 이상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그럴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이 5년 정도 늦춰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기금수익률 제고 같은 경우가 4.5%에서 5.5%로 1%p 인상하겠다고면서, 이 1%p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율 2%에 해당이 되고, 이 같은 경우에는 기금 소진 시기는 5년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뉴욕, 런던, 싱가포르에 이어 지난 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해외 사무소를 신설하는 등 해외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개소식에서 젊은 사람들이 흔쾌히 보험료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기금 수익률 제고를 통해 연금 개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목표 수익률을 높이다 보면 기금 운용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5월 기준포트폴리오를 도입했으며, 이를 통해 위험자산 비중을 현재 58%에서 65%까지 높히겠다는 구상이라고 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준포트폴리오를 도입해 기금의 장기 운용 방향성을 수립하고 수입 원천도 다변화해 수익성을 개선하고자 한다는데요, 이에 따라 해외자산과 대체투자 비중을 더 늘릴 것으로 보이고, 그만큼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 보도는 연금개혁의 핵심인 국민연금 수익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나름 잘 설명하고 있어 인상적인데요,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률을 4.5%에서 5.5%로 높이는 것이 기금 소진 시점을 5년 늦출 수 있다는 내용은 구체적 수치를 통해 시청자들이 개혁안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어 보였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와 대체투자 비중을 높여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도 잘 설명이 됐는데요, 다만 방송 내용이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해외 자산과 대체투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특히 현재까지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에서 이룬 성과를 간단히라도 설명하다면 시청자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기금 운용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해 대략적인 통제 방안과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의 대응 방안을 다룬다면 일종의 불안감을 완화시킬 수 있어 보이며, 연금개혁과 관련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했다면 내용이 더 풍부해졌을 것입니다. 지난달 15일 뉴스10에서는 요즘 SNS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면서, 중독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딥페이크 등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해외에선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호주가 국가 차원으론 처음으로 청소년의 SNS 사용 제한을 추진하고 나섰다는데요, 호주 총리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외에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1세 이하의 스마트폰 사용 금지와 15세 이하의 SNS 사용 금지 법안에 지지를 표명했으며, 이탈리아에서는 14세 미만의 휴대전화 소유를 금지하고 16세 미만은 소셜미디어 계정 개설을 금지하자는 온라인 청원에 교육부 장관 등 사회 저명인사들이 공감을 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선 42개 주의 법무 장관들이 SNS에도 담배나 술처럼 '청소년 건강에 유해하다'는 경고문을 달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서한을 의회에 보냈다고 하는데, 국내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감지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SNS 하루 이용 한도를 설정하는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4세 이상부터 SNS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데요, 우리나라의 만 10~19세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심지어 만 3~9세 유아동도 4명 중 1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라고 합니다.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 교수는 표현의 자유를 들어서 반대하는 쪽도 있는 것 같으나, 그럼에도 일정한 위험성 있는 SNS라든가, 시간을 정해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앱을 개발하거나 장치들을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합니다. 하루에 3시간 이상 SNS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는 미국의학협회 연구도 있어, 과도한 사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청소년의 SNS 사용 제한과 관련한 국내의 모습을 폭넓게 다루고 있는데요, 호주, 프랑스, 이탈리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청소년의 SNS 사용을 법적으로 규제하려는 시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청소년의 SNS 사용 제한 관련 발의된 법안의 간략한 내용도 전달 되어 시청자들에게 한국의 상황도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둔 가정에서는 이 부분을 늘 고민하고 있기에, 청소년이 SNS에 과의존하게 되는 구체적인 이유나 SNS 플랫폼의 중독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면 방송이 더욱 풍부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SNS나 온라인 게임 중독의 구체적인 사례나 피해를 들면서 게임이나 SNS 관련 기업에서도 청소년 관련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멘트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지난 17일 뉴스13에서는, 부부·연인 등 친밀한 파트너 간 살인 또는 살인미수 사건 10건 중 4건 꼴로 가해자가 범행 이전부터 폭력을 행사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습니다. 2015년에서 2021년 사이 부부나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살인미수 사건의 1심 판결문 650건 중 42%에 달하는 274건은 범죄 발생 이전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신체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의 한 보고서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가해자의 92%는 남성이었고, 음주 상태에서 범행한 사건은 38%였다는데요, 그리고 배우자 사이 발생한 경우가 2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인과 전 연인, 사실혼 관계 등이 뒤를 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부부나 연인간 살인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가해자의 이전 폭력 행위와 범죄 관계를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의 연구 통계를 바탕으로 한 보도가 시청자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어 보였

습니다. 보도 분량을 조금 더 많게 하여 이러한 범죄가 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신고의 어려움과 법적 보호 장치 설명을 추가했음 좋았을 것입니다. 가정 내 폭력이나 연인 간 폭력의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폭력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언급한다면 심각성을 더 잘 전달할 수 있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 특히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등을 소개한다면 실질적인 정보 제공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 **최미연 시청자평가원(24. 09. 29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670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최미연입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허위사실을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이 기소 2년 만에 마무리 됐고, 1심 선고는 오는 11월 15일 내려집니다. 이 대표의 구형과 앞으로 있을 재판부의 판결은 향후 정국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TV의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재명 대표는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검찰이 자신을 무리하게 기소해 거짓된 누명을 씌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가 20대 대선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으며, 대장동과 백현동 의혹 관련 발언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주장하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11월 15일에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며, 만약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통상 결심 공판 이후 한 달 내 선고 결과가 나오는 것을 고려할 때 재판부가 쟁점 사안 심리에 보다 신중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의 구형이 있는 후 예상보다 높은 형량이 구형됐다면서 "억지기소, 진술조작, 공소장 변경, 방어권 침해, 객관 의무 위반 등 상상을 초월하는 불공정 불법 수사와 기괴한 말과 논리로 이재명 대표를 말 그대로 사냥" 했으며 격양된 목소리를 냈습니다. 반면 검찰의 구형 직후 논평을 통해 "사법적 정의의 구현이야말로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선거 과정에 있었던 고의적 거짓말에 대한 통상적 재판이면서도, 법원에서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정치적, 법적 영향을 동시에 미치는 중요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당 간 정치적 이념이나 이 대표로 나타나는 이전 정권에 대한 현 정부의 보복성 판결이라는 평가도 있는 반면, 이 대표 개인의 검찰의 권력 남용 비판 내용과 정치적 도덕성에 대한 평가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대표의 검찰 구형을 통해 정치 탄압 및 정치 공세라는 양극단의 정치적 줄다리기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의 구형에 대한 깊이 있는 담화나

향후 정국에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다룸으로써 후속 보도가 이어진다면 시청자들의 사안에 대한 이해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편리함과 작업의 효율성을 주지만, 법 정책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와 관련된 범죄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입법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는데, 실제 범죄 예방 효과를 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안인지 중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 TV의 관련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텔레그램에서 연예인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유포한 10대들이 체포되었으며, 피해자 중 미성년자도 포함되었습니다. 성착취물 범죄가 심각해지면서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법안은 성착취물로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긴급 수사 시 경찰의 접근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협조 부족과 범죄자 추적의 어려움으로 단순 처벌 강화만으로는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한편, 최근 3년 간 경찰이 위장수사를 통해 검거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가 1400명을 넘어가지만, 성인 피해자들에 대한 위장 수사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딥페이크 범죄의 지능화와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위장수사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 N번방 사건 이후 2023년 12월부터 7개월 간 위장수사를 통해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판매한 일당을 검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장수사 남용을 경계하는 지적도 있지만 딥페이크 범죄의 지능화와 범죄 특성상 성인 역시 똑같이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두 기사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긴급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가 주로 텔레그램과 같은 국외의 플랫폼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협조 부족과 범죄자 추적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문제와 함께, 처벌 강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종합적인 대응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는 아동과 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에만 위장 수사가 가능하지만, 성인 피해자도 딥페이크 범죄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대상이 확대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실질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기술적 대응책이나 이용자 및 플랫폼 책임 강화 방안을 비롯해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고령화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비혼 인구의 증가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 경제력 등 다양한 이유로 저출생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의 인구 감소 현상은 지속되고 있으며, 고령 인구는 향후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 23일 보도에서 세계 인구 증가 추세 속에서 한국의 인구는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2072년까지 세계 인구는 약 25% 증가해 102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 인구는 약 30% 감소해 3,6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가 주요 원인으로, 한국의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이며,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2072년에 전체 인구의 약 절반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생산연령인구에 대한 부양 부담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저출생의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 인구의 증가와 저출생으로 인해 인구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에서 나타났듯 50년 뒤 한국인구 3분의 1 소멸이라는 숫자적인 표현 자체는 국민과 사회에 혼란과 사회적 압박, 개인 선택에 대한 비난 등을 유발하거나, 인구 감소의 책임 소재를 기혼 무자녀 부부 혹은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책임 귀인을 유발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출산이라는 표현도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저출생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는 여성 개인의 선택이나 책임의 문제가 아닌, 문제의 본질에 대한 왜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출산율 개선에 있어서도 2072년 출산율이 1.08명으로 오를 것이라는 예측을 보도하고 있지만, 이 전망이 현실적이지 않거나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에 비해 한국만의 문제로 지나치게 국한 시키는 보도보다 결혼과 출산에 있어 개인 및 문화적,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고려한 심도 있는 논의와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는 보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풍선 도발이 거듭되면서 우리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선을 넘을 경우 군사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엄중 경고 했습니다. 현재는 북한에서 날아온 풍선에 대해서는 자연 낙하 후 수거하는 대응 방식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북한의 쓰레기 풍선 도발은 갈등을 유발하려는 도발행위로 비판하며, 국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을 경우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20여 차례에 걸쳐 5,500여 개의 쓰레기 풍선을 남한으로 보내왔으며,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치졸한 도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군은 풍선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거나 선을 넘으면 단호한 군사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아직 군사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풍선은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낙하 즉시 수거하고 있으며, 신속하게 제거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이 풍선 제작에 우리 돈으로 약 5억 5천만원, 북한 시세로 쌀 970t에 해당하는 큰 비용을 들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22차례에 걸쳐 총 5500여개의 쓰레기 풍선을 날렸으며, 지난 9월 22일부터 23일 아침까지

떠운 쓰레기 풍선은 120여개로 밝혀졌습니다. 합참은 이에 대해 북한의 계속된 쓰레기 풍선으로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북한에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 도발은 약 4개월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쓰레기 풍선에 대한 단호한 군사적 조치와 실시간 추적 및 신속한 수거도 물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군사적 대응일 수 있지만, 북한의 목적이나 의도에 대한 분석이 깊이 있게 다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북한이 도발행위를 하는 의도나 정치적 맥락에 대한 분석 또는 북한 풍선 격추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과 풍선 도발의 심각성 등을 균형있게 다뤄준다면 시청자들에게 명확한 내용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황에 대한 정보 전달에 집중했지만 구체적 정보나 대응방안, 군이 밝힌 비용 추정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전달하여 보도의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